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 총력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6월까지 농번기 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전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성)는 오는 6월까지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 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인력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역 특산물인 배와 복숭아 등을 생산하는 과수농가에서 열매숙기와 병지피우기 작업 등으로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과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운영하고, 유관 기관, 자원봉사자, 전주시 청년 농촌 일손돕기 등과 연계해 안정적인 인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시는 농축산정책과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많은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 기간에 농가의 인력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피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전주원협과 전주농협에서는 각각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이들 2개 센터에서는 올해 각각 4000여 명씩 총 8000여 명의 인력을 앞선·중개해 안정적인 농업인력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시는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통해 303농가에 3900명의 인력을 증개해는 등 농가 일손을 거들어줬다.

이와 함께 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농가의 정기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를 방문해 열매숙기와 환경정비 등 일손을 거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농번기를 맞아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0개 마을, 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번기 공동급식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김중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지역농협과 함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가를 위해 적기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전주 만들기 최선”

우범기 시장, 마약 범죄 근절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우범기 시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NO EXIT'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는 SNS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으로, 지난날 26일부터 시작했다.

우 시장은 지난 11일 서거석 장복교육감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NO EXIT'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과 민성욱·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등 3명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부터 일명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패치제 취급 약품을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 초에는 교육청에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시는 또 이달 말까지 마약류 집중



우범기 전주시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올 하반기에도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을 계획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는 만큼 이번 캠페인이 마약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안전한 농산물 공급 위한 안전성 검사 강화

전주시, 농산물 직매장·공공급식 출하 전 전주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실시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산(産)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출하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직매장과 공공급식 등에 출하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잔류항생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출하농가 대상으로 전주시 품질인증제 및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성 검사는 출하 농가 사전 의뢰를 통해 생산·유통·판

매단계에서 농산물의 시료를 수거해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 검사를 통해 살충제와 제초제 등 총 46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잔류농약 적정 허용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시는 올해 8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검사 결과는 관련 기관에 통보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직매장과 공공급식 출하가 중지되고, 폐기 조치와 직매장 출하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직매장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과 '전주시 농·축산물 품질인증제'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소비자 모니터링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산물 잔류농약 시료를 수거하고, 농산물 판매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직매장 이용 편의 향상에 힘쓰고 있다.

김중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와 농산물 품질 관리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집중안전점검

전주시, 건축·전기·소방 등 전문가와 금암동 소재 대상 실시

전주시는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18일 금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을 찾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인태 전주부시장과 건축·전기·소방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안전난간,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임시소방 시설 설치 등 전반적인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시는 점검 결과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하고, 기간을 두고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 전까지 시공사가 조치토록 한 후 처리사항을 확인하는 등 신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꾸준히 다양한 현장의 안전 실태를 살펴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김옥기기자

전주시의회 전주비전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주비전연구회(회장 신유정 의원)가 18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행 전주형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생활인구 100만 대도시로서 전주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용역 수행은 전북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맡았다.



보고회는 연구 주제 및 방향성, 연구 계획 등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전주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주비

전연구회는 다각적인 연구로 의회의 정책 제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신유정, 이성국, 이병하, 이보순, 최명권, 김광송, 최서연, 윤해정, 전운미, 김운철, 이국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신유정 전주비전연구회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생활인구 100만 대도시인 전주시의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례 사무 발굴이 필요하다"며 "특례사무 발굴 등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 더욱 연구하는 비전연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반려동물 복지 향상 위한 영업장 지도·점검

전주시는 31년 만의 동물보호법 개정(4월 27일 시행)에 발맞춰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 영업장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가 강화되고,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시 처벌 강화 등이다.

특히 개정된 법률에 따라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판매·수입·장모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또한 무허가 영업 중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내 지도·점검 대상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총 199개소로, 시는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에 대해 영업장 폐쇄 등 강제 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 영업행

위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영업장 폐쇄 조항이 신설돼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동물 의무로는 지나치게 짧은 줄(2미터 이하)로 묶어서 기르지 않을 것,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가리지 않을 것이며 이외에도 맹견을 사육할 경우 책임보험 가입 의무,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제 등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